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입만열면 부동산 구설수 野 “정무수석부터 규제”

강기정 “부동산 매매, 거의 투기”
청와대 “검토하지 않겠다” 선그어
한국당 “다수 국민 투기꾼으로 몰아”

청와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잇따른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시장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정권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말 실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불안감을 키운 청와대의 부동산 논란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입장에서부터다.

강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 단순히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앞서 참여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으로 인해 포기했던 정책이다. 그 래선지 강 정무수석 발언에 청와대는 곧장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여론에서는 ‘고강도 규제 신호’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논란으로 작용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 정무수석 발언과 비슷하게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옮겨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뿐인가. 자칫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강 정무수석 개별발언’으로 치부할 경우, 청와대는 조율하지 않는 발언이 나오는 ‘정책적 무능력’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부동산 논란 질타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같은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무수석부터 규제하는 것이 순서”라며 “한국당은 지난 16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제한완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일부터 9억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며 “이는 치솟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다수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CDA 교사 2100명 양성

일반고 교사 대상 첫 직무 연수
교원 CDA, 과정 설계 상담·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20일~22일까지 3일(20시간) 동안 ‘교원 CDA(A Curriculum Design Advisor, 교육과정·진로·진학 설계 전문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원 CDA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지난해 7월 담화문에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교원 CDA라는 개념을 제시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1부터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권오현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교사의 CDA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차 연수 210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 2회 지속 CDA 연수를 실시해 전문 교원 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모든 일반고가 10여명의 CDA를 보유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민생’, ‘정권심판’... 설 민심 향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與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 다할 것”
굵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주도
野, 청년·부동산 등 정부 실정 꼬집어
“청년 대하는 문재인정권 빙약” 비판

여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자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 세우는 모양새다.

설 밤상은 불과 80일을 앞둔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즉 설 민심이 다가올 총선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그래선지 여야는 설 민심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및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중심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홍의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경찰 등 권력 기관 개혁 완성과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아있는 개혁과 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일렀다.

민주당은 최근 ‘4+1’ 공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

롯한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주도했다.

즉 주요 개혁·민생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온 ‘역량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 ‘국민 체감 성과’를 이끌 민생 중심 정당이라는 확신을 심겠다는 각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으나 별 다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청년 및 부동산, 환경 분야 등을 꼬집었다.

김병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된 불과 7개월만”이라며 “청년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빙약하고 천박한 인식에 널널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적인 취업대란에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부지 기수인데, 정작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년소통정책관은 자리를 스페 삼아 총선에 출마하겠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부연했다.

권현서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더불어민



(위)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관련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아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제3기 청년정치 캠퍼스 출업식에 참석한 모습.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당은 환경 전문변호사라며 이소영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며 “그런데 이 변호사는 환경·에너지 전문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계에 따르면)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교육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건국대 의전원 기초의학 종합평가 3년 연속 1위

대학간 교육표준화 목적 전국 시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019년도 기초의학 종합평가에서 전국 34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년 연속(2017~2019년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사업단이 주관하는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약리학)을 마친 이후에 보는 전국단위 시험으로 대학간 교육표준화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기초 의학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측정하고 미래 의학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건국대학교 의전원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1위, 4위, 2위, 1위를 차지해 내실 있는 기초의학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기술교육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계고 전문교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도 참여한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TechEdu 4.0: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교육’

을 주제로, 이기권 인하대 초빙교수가 ‘포노사이피엔스 시대의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한다.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주제로 임성규 교수(조지아텍)가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수방법’을, 정우희 교수(한동대)가 ‘초격차를 만들기 위한 AI 혁신 전략’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PS와 디지털 트윈의 미래’를 발표하는 등 트랙별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삼육대 오덕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재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